

창원의회소식





마산합포구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마산회원구



비례대표















권성 현



김 장 하 백 태 현



최은하



Winter/2022 Vol.38

4



구점 득



김우겸



a



공 창 섭



성산구





김 경 희



이 찬호





김경수



노창섭









진해구



G



김상현

김 태 웅



이 해 련



김 인 길





박 춘 덕



심영석



Contents

02 인사말

04 의원현황

10 의정활동

10 주요안건 처리현황

19 5분 자유발언

30 시정질문 및 답변

34 건의문 · 결의문

46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활동

52 의원동정

52 마산회원구 의원포커스

59 의원연구단체 활동

60 포토·뉴스광장

70 의원칼럼 · 기고

80 2022년도 회기 운영계획

발 행 인 창원시의회 의장

발 행 처 창원시의회 사무국

제작부서 창원시의회 의회홍보담당

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전 화 055)225-5334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해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우리는 창원특례시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가 남다른 의미를 갖듯이, 올해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창원시의 역동적인 에너지원이 될 특례시출범으로 시민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민생경제는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주민 참여권이 강화되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의회의 커진 권한과 책임에 걸맞는 정책역량 으로 시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올 한해도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겸손한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상생과 협치로 도시 경쟁력과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멈추지 않고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임인년 새해, 한반도를 누비던 호랑이의 힘찬 기운 듬뿍 받으셔서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반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회 의장 이 치 우



의 장 단



의 장 이 치 우 국민의힘 창원더선거구 (웅천, 웅동1·2동)



부의장 공 창 섭 더불어민주당 창원다선거구 (봉림, 용지동)



의회운영위원장 조 영 명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기획행정위원장 백 태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경제복지여성위원장 문 순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문화환경도시위원장

 박 춘 덕

 국민의힘

 창원너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건설해양농림위원장 이 천 수 국민의힘 창원사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 영 명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부위원장 구점 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김 상 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 상 현 더불어민주당 창원하선거구 (충무, 여좌동)



심 영 석 더불어민주당 창원더선거구 (웅천, 웅동1·2동)



이 종 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 헌 순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 길 상 국민의힘 창원아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 태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부위원장 김 상 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 창 섭더불어민주당창원다선거구(봉림, 용지동)



김 인 길 국민의힘 창원거선거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김 종 대 더불어민주당 창원타선거구 (회원:2, 석전, 회성, 합성:동)



박 남 용 국민의힘 창원바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박 성 원 더불어민주당 창원자선거구 (완월, 자산, 오동동)



이 우 완 더불어민주당 창원카선거구 (내서읍)



정 순 욱 더불어민주당 창원거선거구 (태백, 경화, 병암, 석동)



조 영 명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 문 순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부위원장 이 헌 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 경 희 더불어민주당 창원라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김 상 현 더불어민주당 창원하선거구 (충무, 여좌동)



김 순 식 국민의힘 창원차선거구 (교방, 합포, 산호동)



박 선 애 국민의힘 비례대표



임 해 진 국민의힘 창원타선거구 (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



전 병 호 국민의힘 창원자선거구 (완월, 자산, 오동동)



최 영 희 정의당 비례대표



최 은 하 더불어민주당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한 은 정 더불어민주당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 춘 덕 국민의힘 창원너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부위원장 정 길 상 국민의힘 창원이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



김 우 겸 더불어민주당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노 창 섭 정의당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박 현 재국민의힘창원다선거구(봉림, 용지동)



이 종 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 찬 호 국민의힘 창원라선거구 (반송, 중앙, 웅남동)



이 해 련 국민의힘 창원하선거구 (충무, 여좌동)



지 상 록 더불어민주당 창원사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진 상 락 국민의힘 창원카선거구 (내서읍)



최 희 정 무소속 창원차선거구 (교방. 합포, 산호동)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이 천 수 국민의힘 창원사선거구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부위원장 심 영 석 더불어민주당 창원더선거구 (웅천, 웅동1·2동)



구점 득 국민의힘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권 성 현 국민의힘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김 경 수 국민의힘 창원마선거구 (상남, 사파동)



더불어민주당 창원가선거구 (동읍, 북면, 대산면, 의창동)



김 태 웅 더불어민주당 창원너선거구 (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백 승 규 더불어민주당 창원바선거구 (가음정, 성주동)



손 태 화 국민의힘 창원파선거구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전 홍 표 더불어민주당 창원아선거구 (현, 가포, 월영, 문화, 반월중앙동)



주 철 우 무소속 창원나선거구 (팔룡, 명곡동)

의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108회 임시회(총25건) · 제109회 정례회(총98건)의 의결목록과 주요안건 처리내용

제108회 임시회 (2021. 10. 21. ~ 10. 27.) / 총 25건

의 결 목 록

• 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	원안가결
• 마산항 가포 모래부두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내실있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원안가결
•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주요안건 처리내용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mark>표발의 김상찬</mark> 의원

· <mark>심사결과</mark> 원안가결

˙ <mark>제안이유</mark>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김상찬 의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전홍표 의원

<mark>- 심사결과</mark> 원안가결

⁻ <mark>제안이유</mark>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인 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창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대<mark>표발의 심영석</mark> 의원

⁻ <mark>심사결과</mark> 원안가결

<mark>- 제안이유</mark>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김경수 의원

<mark> 심사결과</mark> 원안가결

- <mark>제안이유</mark>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이헌순 의원

<mark>- 심사결과</mark> 원안가결

제안이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범죄예방과 창원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전홍표 의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길러 창원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종화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mark>ㅡ 제안이유</mark>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을 재활용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중고 재활용품의 수리 및 판매

이외에도 재활용 관련 문화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제109회 정례회 (2021. 11. 25. ~ 12. 20.) / 총 98건

의 결 목 록 ─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K2전차 4차양산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소부장 산업을 비롯 제조업 현장의 이익만 챙기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촉구 건의안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안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지역특화형 문화시설'국립'전환 건의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창원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창원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의 결 목 록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안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040년 창원도시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목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목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추산아파트상가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코하이젠(주)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원안가결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운영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창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창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

의 결 목 록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창원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창원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창원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창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창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창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창원시의회 인사관리 규정안 창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쌀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곡 실시 촉구 대정부 건의안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주요안건 처리내용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심영석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창원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박성원 의원

<mark>- 심사결과</mark> 수정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 관장으로 위촉하여 재능 나눔 기부 문화에 동참하고 효율적인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박성원** 의원

··· <mark>심사결과</mark> 원안가결

제안이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
 으로써 창원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김우겸 의원

<mark>- 심사결과</mark> 원안가결

 제안이유 창원시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이종화 의원

<mark> 심사결과</mark> 수정가결

제안이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 <mark>제안이유</mark>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수소 충전시설의 구축 확대가

필요하며, 공유재산에 전기·수소 충전시설을 영구 시설물로 축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mark>표발의 김종대</mark> 의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안이유 창원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

하여 청각 · 언어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시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박선애 의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 <mark>제안이유</mark> 창원시민의 생명보호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자살예방

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지원계획을 보완하고 자살위험자 등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윈 조례안

[—] 대표발의 최희정 의원

— <mark>심사결과</mark> 원안가결

제안이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공창섭 의원

<mark>- 심사결과</mark> 원안가결

- 제안이유 향토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함.

창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전홍표 의원

<mark>- 심사결과</mark> 원안가결

- <mark>제안이유</mark>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전홍표 의원

⁻ <mark>심사결과</mark> 원안가결

제안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 설치시 공원 및 녹지 점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 보완하기 위함.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김종대 의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임업인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10. 21.(목)



최영희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민간사업자만 이익을 본 마산로봇랜드 소송 패소, 이자포함 혈세 1,458억 지급 판결 누구 책임인가

마산로봇랜드는 2019년 말 민간사업자 대우컨소시엄의 채무불이행 선언과 테마파크 운영 중단, 실시협약 해지 통보로 소송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투자금과 테마파크 운영손실금만 1126억, 여기에 332억 연체이자 포함 약 1458억 지급판결이 현재 패소 결과이다. 테마파크 적자운영 하에 2단계 사업 3340억 조달 투자자를 찾기 힘든 지금, 소유권 이전문제로 인한 패소 관련 명확한 소명과 직무유기 및 배임한 책임자 문책하고, 산업로봇 등 인근 구산해양관광단지와 겹치지 않게 원점에서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게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대안마련을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재단은 의회에 관련 패소자료를 공개하고 범시민단체를 포함 합동특별조사위원회와 대책위 구성을 촉구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처리 제대로 되고 있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시민들의 민원을 받았다. 이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상반응을 보고했는데 한 달 이상 '접수대기중'으로만 나타나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 집행기관은 미접수 건수는 없다는 대답을 했다. 경남도, 질병관리청에 사실상 모든 권한이 있어 창원시 보건소는 확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집행기관은 경남도와 질병관리청만 믿을 게 아니라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를 통해 백신 접종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상반응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알려 주고, 언론 및 대시민에게 홍보할 것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김우겸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터널과 도로는 본청에서 책임관리를 하자

2021년 기준 진해구는 시설물 관리 비용만 한해 66억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소사-석동, 웅동-장유, 진해신항 진입 도로까지 진해구로 이관돼 유지비용이 100억 이상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진해구 한해 예산 대비 10% 이상을 차지한다.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인력도 진해구에 포함되다 보니더 큰 피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11년간 진해구에서 관리했던 터널과도로관리 부분을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로 출범할 때 본청에 작은부서를 만들어 통합 관리하자. 만약 이러한 부서 신설이 어렵다면 2022년부터 11년간 성산구에서 예산과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 제안한다.진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통로인 터널과 물류도로를 진해구에서만 비용을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선개운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제안하며

지난 8월, 경남도선관위는 올 하반기부터 "현수막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생겨 친환경적인 홍보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내년에 있을 각종 선거는 물론, 선거운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현수막은 시 지정 게시대를 확정해 게시하는 것이다. 둘째, 유세차량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지역별로 주·정차 위치를 정해놓는다. 셋째, 선거 사무소는 유권자 접근이 편리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센터 등의 공공장소를 지정해 후보자 홍보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넷째, 선거비용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동시지방선거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사용돼지역업체 활용은 필수다. 이런 제안들이 쉽게 반영될 수 없지만 창원시와 창원시의원들부터 동참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박남용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소규모지역 개발로써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기간이 4~5년으로 단축된다. 본 의원은 일선 현장 주민들로부터 문제점을 청취하며 개선사항을 알아봤다. 첫째, 투명한 사업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절차가 간소한 만큼 위험이 커 주민피해 예방행정에 힘써야 한다. 셋째,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법률개정 등을 건의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창원시에서는 최근에야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법률개정 등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한다.



이헌순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병역명문가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자!

현재 전국 병역명문가는 총 7631세대 3만 8665명이 선정되었다. 경남도는 457세대 2348명, 창원시는 205세대 1066명으로 경남도의 약 45%를 차지한다. 창원시는 2012년부터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대사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보건소 진료비, 시립장사시설 사용료에 국한되어 있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 창원시는 특례시를 앞둔 시점에서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혜택이되는 창원시설관리공단, 창원문화재단,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시에서운영하는 기관과 시설의 관람료, 수수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

창원시장 측근 연루의혹!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과정과 사업내용을 공개하라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은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네 차례 진행했지만 실패하고, 지난 5월 31일 5차 공모를 거쳐 지난 10월 1일 마산 해양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여러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한 시민단체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선정과정에 창원시장 최측근이 개입되었다는 기자회견과, 지난 10월 14일에는 시민단체 창원물생연대에서 주거시설 규모를 두고 부동산 개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부적격임을 주장하고 사업내용 공개를 촉구했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과정과 사업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각종 의혹과 공모 과정에 대해 경찰수사가진행 중으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노창섭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10. 27.(수)



구점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은 명품도시로 가고 있는가?

창원시가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지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창원시정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린다. 첫째 토건사업으로 회귀이다. 창원시는 대부분 존재도 모르는 박물관, 미술관 등이 많지만, 이순신 타워, 창원 산업사 박물관 등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사업의 부재이다. 셋째, 친환경도시 이미지 퇴색이다. 셋째, 지도력의 부재이다. 공론화 과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허성무호는 공론화 정치·위원회 정치로 책임은 나누었고, 결정은 느렸다. 마지막으로 창원 인구정책에 대해 제안한다. 창원이 먼저 빈집을 수선 제공과 일자리 연계 등 이민자에 대한 혜택과 교육을 통해 창원 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안한다. 창원시가 명품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길 당부한다.

문화정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창원특례시가 되기를!

문화정치란 문화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의미한다. 창원시는 역사적, 지리적, 인적으로 문화예술자원이 풍부하다. 이에 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 용역결과를 토대로 문화도시조성 정책을 제안한다. 먼저, 창원문화재단의 적극적 운영과 다양한 역할이다. 문화공급자뿐만 아니라 시민이 직접 문화 예술창작과 제작에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문화플랫폼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존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지속적,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지정을 위해 창원문화복합타운의 개관과 역할, 창원시 문화상 시상의 개정, 노산문학관 명칭환원,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한 처우개선 제고 등의 과제를 시민과 예술인의 입장에서합리적으로 수용, 해결해 가는 정책적 재량, 전략, 의지가 필요하다.



박선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홍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실행합시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창원시는 2019년 기준 경남지역에서 교통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1순위 도시이다. 특히 사고 건수가 증가한 사유 중 하나로 교차로 내의 고의 교통사고로 인해 경상자 수가 증가한 부분이 크다. 따라서 창원시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몇 가지 개선책을 제안한다. 첫째, 교차로 내 좌회전 시 색깔 주행 유도선 설치이다. 둘째, 교차로 내 차량 유도선 진로 변경 시에 주의 운전이 필요하다는 홍보 등의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주길 바란다. 창원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고의사고에 대해 단지 색깔 유도선 설치만으로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교차로 내 색깔 유도선 도입으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심영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신항 주민의 민원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요구한다.

신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신항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신항 지역은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사업 발표 이후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돼 아파트가 늘고 있다. 하지만 항만 건설의 대부분은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과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사업 완료 후 창원시에 이관돼 사업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첫째, 아파트 주거지역 도로와 항만 주도로 침수 문제이다. 둘째, 고등학교 부족이다. 진해 동부지역인 웅동1동, 웅동2동, 웅천동에는 2개의 고등학교가 있지만 이미 과밀학급으로 편성돼 680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1시간 정도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셋째, 신항 배후도시 주변 불법주차 문제와 문화공간 부족 문제이다. 따라서 창원시와 경자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점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죽어서도 외로운 그들을 기억합시다!

지난 어느 더운 날, 누가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빈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참으로 황망한 고독사였다. 국내 무연고사망자가급증하고 있다. 우리 창원시는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만지난 9월 말까지 총 23명의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창원시의회와창원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상위법에 근거해 '공영장례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선출직인 우리 시의회가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고귀한 대의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할 수있게 됐다. 무엇보다 모든 죽음은 고독하다. 죽을 때 혼자이고, 죽은 뒤에도오래 혼자라면 더 슬플 것이다. 그들의 주검 앞에 하늘이 무너진 듯 울어줄누군가가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우리 창원시의회가 되었으면 한다.



김종대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제109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21. 11. 25.(목)



박춘덕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시는 의회 심의에 참여하고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건립 사업에 집중하라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사업은 진해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특화된 복합 문화공간 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진해문화센터는 1,200석에서 1,2차에 걸쳐 관람석 규모를 축소해 투융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는 사업비 496억 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600석 규모다. 이 사업은 진해 지역 숙원사업이다. 인근의 주민과 상가는 건립에 대한 기대로 정착했지만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 창원시는 풍호동주민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연내 착공을 약속했으나 지지부진하다. 창원시는 활력있는 마산, 역동하는 창원, 매력적인 진해를 표방하는 생. 동. 감을 완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의회와 소통하길 바란다.

탄소 중립과 침체된 창원 경기 회복을 위한 원전의 필요성

원자력 발전은 원전에 대한 우려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다소 무거운 주제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다. 무엇보다도 창원시가 원전의 영향을 직격으로 맞고 있다. 경남은 원전산업의 중심이며 그중 창원에는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200여개의 관련 업체가 있다. 현재 창원산업단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생산, 수출, 고용이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원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은 원전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활용하는 우리의 노력과 기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탄소중립과 침체된 창원시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



김경수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구점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명서2동 주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창원시는 공원 일몰제에 관해 도심 속 공원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명서2동 주택가 주민은 사화공원내 아파트 건립으로 일조권, 조망권 피해 등으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평지도 아닌 공원능선으로 30층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면 총 높이는 100m에 달하고 길이는 800m로 아파트 성벽을 이루게 된다. 온 동네가 햇빛을 볼 수 없는 그늘로 덮일 것이며 푸른 하늘 조망권과 상쾌한 바람도 차단될 것이다. 시에서는 공원 내 아파트 건립에 관해 당해 지역은 물론인근 지역의 피해에 대해 사전검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명서 주민과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없었다. 서민들의 절규에도 귀기울이는게 사람중심행정일 것이다. 시와 시공사는 아파트 건립 지반을 낮추든지, 아파트 층수를 낮추든지 지역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전병호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오동동 평화의 소녀상 추모공원 건립과 구)성호동 환경개선에 대하여

오동동 문화광장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이전, 추모공원 건립으로 문화광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15년 8월,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 중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 되었다. 명칭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소녀상이라 하지 않고 '인권자주 평화다짐비'라 변경했다. 이 소녀상이 오동동 현 위치에 자리 잡기까지는 찬반 양론이 극심했으며, 소녀상에 대한 위해와 모독이 가해지는 등 수난을 겪었다. 이제라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때처럼 모두가 인정하는 곳에 이전 설치해야 한다. 다음, 성호초등학교 앞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근 주택 주민은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다. 오동동으로 통합되면서 옛 성호동 주민은 소외감을 느끼며 공영주차장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더 많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창원시는 주민을 위해서라도 꼭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제109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12. 13.(월)



노창섭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과정과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의회와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론화를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을 촉구합니다!

지난 10월 21일, 5분 발언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과정과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창원시는 지금까지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지난 15년 동안 지역의 시민환경단체와 마산지역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이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창원시도 지난해 10월 수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개발과 구도심과의 상생발전을 약속한 만큼 우선협상 대상자의 사업계획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함에도, 사업자의 영업비밀과 이익을 운운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창원시는 모든 자료를 언론, 의회에 공개해시민과 의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민자사업자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례시 출범일(1월 13일)을 '창원시민의 날'로 정하자

우리는 이제 대망의 창원특례시민으로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는다.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자치재정력을 강화해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창원만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드높여야한다. 그 시작은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일이다. 이 시점에서 지난 10년간 이어져 왔던 7월 1일 창원시민의 날을 1월 13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창원시가 지역 간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자는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1월 13일을 '창원시민의 날'로 정해 시민들과 그 뜻을 함께하는 것도 새로운 시대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우리의 몫이라 생각한다.



김상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백승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창원특례시 출범! 시민화합과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민선 7기 출범 후 광역시 대신 '창원특례시' 추진을 시정 제1의 목표로 두고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간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20년 12월 9일, 32년 만에 역사적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창원특례시가 대한민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발맞춰 창원특례시의회의 출범 준비도 한창이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임용권자 변경에 따라 제·개정되어야 하는 자치법규만 해도 41건에 이른다. 특례권한 확보와 재원 등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창원특례시는 시민화합과 새로운 출발의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한 차원 높은 창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서항친수공간을 해맑은 마산만과 함께 창원의 랜드마크로 만들자!

올 연말 개방 예정이었던 서항친수공간이 발 빠른 행정으로 10월 8일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마산항 서항지구 약 2.3km를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휴식처로 제공하고 있다. 잘 조성된 친수공간이 쇠퇴하던 도시, 해양도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이미 증명됐다. 우리 창원시도 그 과정을 밟고 있다. 서항친수공간은 해양도시로서 도시 이미지와 도시환경을 개선해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창원시의 위상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서항친수 공간을 해맑은 마산만과 함께 창원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



전홍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최은하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코로나19로 힘든"소상공인"지원정책 확대 추진 촉구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올해 창원시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다. 2021년 추진했던 창원블랙위크는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정책과 맞물려 창원시 경제와 창원시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성과를 냈다. 2022년 창원시는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커머스 사관학교 설립,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역특화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진상락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도심 속 대표 생태하천 광려천 전담부서 설치 촉구

무학산에서 발원해 내서읍을 관통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광려천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422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했다. 그러나 내서읍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준공되어감에도 현재 광려천은 명품 힐링 광려천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문제점의 근본 원인은 두 가지로 꼽힌다. 첫째, 광려천 전담부서와 인력의 부재이다. 둘째, 임기응변식 하천관리이다.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시 땜질식 보수만 이뤄지고 있다. 창원특례시 출범에 맞춰 광려천 전담 조직을 설치해 명품 광려천이 창원특례시 성장의 젖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창원시는 코로나 대응 보건종사자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해 기업지원 선정기준 개선과 고용협약을 세워라

공공의료 확대 우선은 같은 위험업무에 종사하고도 보상이 적은 노동자와 갑자기 늘어난 휴직자를 대신해 인력보충으로 파견된 사회초년 수습생 등의 처우 개선이다. 의료종사자 모두 비상근무 상황으로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길 바란다. 이어 기업지원에 총액 대비 고용협약을 둘 것과 지원목적이 분명해야 하므로 고용영향이 적은 선정평가표 개선을 제안한다. 강소기업에서 스타기업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기업이 되어도 고용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세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배제하고 지원금을 환수해 시민 일자리 만들기와 진짜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 성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최영희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09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 12. 20.(월)



이종화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진해문화센터 · 도서관 조기 착공 촉구

진해문화센터 · 도서관사업은 2008년 현재의 위치에 '중부도서관건립'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통합시 출범 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14년이 지났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1월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다는 보도에 인접한 1만여 세대의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창원시의 노력에 감격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진해가 홀대받는 게 아닌가 의구심마저 든다. 다행히 행정안전부로부터 진해문화센터 · 도서관사업 착공준비금이 포함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으니 조기 착공을 기대한다.

해양신도시·서항친수공원·돝섬을 자원화하여 한국의 마리나베이시티,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하자

마산합포만은 거대한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 친수공원, 전설과역사적 스토리가 가득한 천혜의 돝섬, 도심철도에서 아름다운 산책로로변신한 임항선 그린웨이, 싱싱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어시장 등 아름다운경관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해양신도시를 초고층 주거공간과 상가위주보다는 싱가폴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유려한 건축물을 갖춘 떠오르는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해 주길 바란다. 마산이 가진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지리적 자원을 접목해 미래 먹거리 관광명소로 초기 설계되길 바란다.



박선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우겸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동물보호 정책은 '인프라 투자사업'입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에는 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권역별로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공공급식소' 설치를 요구한다. 공공급식소 입지 선정은 동물의 동선, 시민의 생활권 등을 검토해야 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에 입지 선정은 동물보호를 위한 현장활동 및 전문 비영리단체와 수의사협회 등 동물보호 관련 의료전문가 등과 '민—관 공동추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지상록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마산 밤바다

창원시의 해맑은 마산만 프로젝트와 함께 마산만에는 잘피가 돌아오고 철인3종 경기가 개최될 만큼 수질이 깨끗해졌다. 본 의원은 서항친수공간과 해양신도시가 마지막 남은 마산의 희망이라고 확신한다. 이미 서항친수공간과 해양신도시의 기대에 대한 시민들의 마음이 이를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시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해양신도시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아무쪼록 해양신도시는 정치인의 것이 아닌 시민들의 것임을 명심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창원특례시, 함께 초심의 마음으로!

민선7기 시정의 잔여 임기는 4불(불안, 불편, 불쾌, 불만) 혁신과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을 위한 창원을 만들어 가는데 모두가 동참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민들께서는 집행기관과 시의회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2018년 7월 1일 의회에 들어온 그 날의 '초심'처럼, 함께 노력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께 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떠한지를 묻고 싶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가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한다. 창원특례시를 위해 '함께' 멀리 갈 수 있길 기대한다.



정순욱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잊혀진 전쟁! <마산방어전투>를 아십니까?

마산방어전투는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 중 가장 길고, 많은 희생자를 낸 전투였다. 해병대의 진동리지구 전투, 서북산 전투, 함안지역에서 벌어진 전투로 인민군을 물리치고 부산임시수도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중요한 전투가 6·25전쟁사에 누락되어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지역의 중요한 역사유산인 마산방어전투를 후대에 알리기 위해 기념관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지금이라도 마산방어전투를 재조명하고 전쟁기념관을 반드시 건립해 주길 당부드린다.

의회

시정 질문 및 답변

제109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 12. 16.(목)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시정질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지연의 건

- 장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이 지연을 거듭하고 있다. 10월 27일 부분 개관하라고 통보하였으나 무산되어 다음날 귀책사유와 함께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창원시는 10월 27일 부분 개관이 어렵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 【시장】운영법인의 주주는 시행자와 SM이다. 또한 개관 일정은 6차 운영위원회에서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다. 임시 개관 등 사업 진행의 기본 의지 마저도 주주 간 이견으로 보여주지 못해 우리 시는 귀책사유 통보와 치유 계획을 요구하게 되었다.
- 지 소유가 될 건물의 시설이 미비한 채로 기부 채납을 받으면 창원시민의 세금으로 시설을 해야 한다. 시민 혈세가 추가로 들지 않으려면 시설이 완비된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야 할 것이다. 기부 채납을 위한 점검 항목들은 준비되어 있는가?
- 【시장】기부채납을 받으려면 먼저 시설 시공이 완공되어야 한다. 원칙을 가지고 사용 전 검사를 하고미비점은 보완해 최종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다

보육교사 안식휴가 제도 개선과 창원형 어린이집 시범운영의 건

- 장원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 안식휴가 제를 실시했다. 보육 현장에서는 보육의 특성을 강조해 정기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연성 확장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은 어떤지?
- [시장] 우리시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연성 확장은 공감하는 부분이다. 주기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나가겠다.
- 2022년부터 실시할 창원형 어린이집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돌봄욕구가 높은 만 3세이에 대한 시범 운영 검토 계획은?
- A 【시장】지금 추진하는 0세아 전담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만 3세아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창원형 보육시스템 만들기에 힘쓰겠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공원조성 관련 질의

- 전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에 따라 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용역 결과와 변경안이 발표되었다. 조성계획은?
- 지장》 내년 9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에 착공, 24년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는 유해공간이었다. 오래 기다려온 만큼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단계별 계획을 세워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시장]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 착실 하게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보여주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맞게 정리해 가겠다.



사화공원 개발관련 질의

- 지 사회공원은 2017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개발계획은?
- 【시장】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020년 6월 30일 자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걸려있는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자본으로 공원 터를 매입하고 조성해서 기부 채납하는 공익사업이다.
- 사화공원은 다양한 가족 휴양공원 시설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협약이 변경되었다. 분양가는 올라가고 편의 시설은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시장]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분양 사업과 보상비, 시설공사비, 부대비 등 총 투입되는 비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구조이다. 이번 협약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와 협의 하여 경남연구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였고, 검증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및 실시협약 변경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협약 변경으로 민간사업자 수익은 얼마나 늘어났으며, 어떻게 측정되었나? 또한 1,580세대 에서 385세대를 늘리고 제안 당시 분양기를 1,450 만 원으로 10% 인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 A 【시장】 금번 협약 변경 협의 중인 민간사업자수익은 총 사업비의 협약 시 반영된 7%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협약 이후 총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세대수와 분양가를 조정했다.

- 공원 개발과 관련한 명서2동 주민들에 대한 최대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 [시장] 명서2동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원 개발과 관련 없이 오래전 단독주택지의 종 변경을 요구했고, 그것과 관련해 지금 더 크게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성산구·의창구 지역의 단독주택지에 대한 요청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이지역의 단독주택지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 방안을 검토하라고 용역을 지시했다.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관련 질의

- 창원자족형 행정복합타운 개념과 추진방향은?
- [시장] 행정기능 서비스가 강화된 행정자족의 도시개발을 위해 마산회원구청 등 공공기관 13개소, 공공주택 5930세대, 공원 8곳이 입주하는 부지 조성사업이다.
- 자족형 복합타운 조성 문제점을 미리 검토해야 하는데, 2007년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게 된 계기는?
- [시장]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높았다. 또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고 도시 발전 기회를 잃어버리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에 적합한 개발을 위해 13개의 공공기관 유치에 노력하였다. 그결과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북성로는 지금도 출 · 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이 많은 지역이다. 서마산IC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 [시장] 서마산IC에 대한 개선 계획 입체화는 국토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설계가 잘못됐고 주변의설계도 잘못됐다. 국토부 예산으로 개선해 달라는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과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건

- 지정연구원 용역을 거쳐 지난해 10월 18일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비전 발표는 어떤 내용인가?
- (시장) 1차에서 3차까지 공모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시정연구원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은 전체 면적 중 32%인 스마트한 공간에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나머지 68%는 자연친화 및 지속 가능한 공공영역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고 마산의 원도심과의 조화와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 5차 공모는 4차 공모 대비 개발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왜 4차 공모는 탈락 하고 5차 공모사업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 었나?
- 【시장】4차·5차 공모 모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선정한 것을 수용했다.
- 현대산업개발은 4차 공모 당시 참가의향서만 제출하고 최종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5차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 아닌가?

A 【시장】공모지침서 규정에 따르면 질의·답변서가 공모지침서보다 우선 해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모지침서에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특혜를 준 사실도 없다.

SM타운 개관지연의 건과 향후 참원시의 대책

- 창원 SM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금이 최소 1,545억 원에서 최대 2,720억 원이라고 추정 하고 있으나 올 7월 7일 한울 회계법인이 제출한 사업비 검증보고서에는 개발이익금이 최소 329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최소 1,216억 원에서 최대 2,311억 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 [시장] 본 사업의 개발이익은 사업 초기부터 특혜 논란과 사회적 이슈였다. 시행자의 사업수익 검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시행자가 동의하여 올해 6월 외부 회계법인 두 곳에 의뢰하여 검증 절차를 거쳤다. 1차는 서울 소재 삼일 회계법 인이고요, 2차는 창원 소재 한울 회계법인입니다.
- SM타운이 개장되지 않아서 시행사, 운영법인, SM 측에 귀책사유를 통보하고 치유 계획서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12월 말에 협약 당사자들이 치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창원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A 【시장】 법대로 할 것이다.
- 2020년 6월 당시 김동수 감사가 있을 때 협약 해 지 통보를 했다가 갑자기 특보에게 시행사 타협을 하여 입장을 번복한 적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번복할 수 있지 않나?
- (시장) 그렇지 않다. 중도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귀책사유가 우리 쪽에 많이 오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고, 나중에 소송에서 거꾸로 우리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이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시행사나 시공사, SM이나 운영사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리낌도 있을 것이 없다.



로봇랜드 소송 패소 관련과 2심 소송 전략 및 사업전환이 건

- 로봇랜드 1심 소송이 패소했다. 1심 소송의 6회 재판 변론 중 담당 과장 1회, 국장은 참석을 안 했다. 재판 관할지가 창원법원이고 산하기관 업무 협 의인데 6~8급만 1,500억 소송에 참여했고 변호 인 변론이 일반 개인 민사처럼 겨우 2~3분 6회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패소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스마트혁신산업국장] 통상적으로 심리참여나 변론에 참여할 때 실무자 중심으로 먼저 간다. 창원시와 경상남도, 로봇재단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심리하기 전 서면으로 봤다.
- 7~8일 전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 소송 있는 날 1~2일 전에 한번, 총 두 번 봤던데?
- A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일주일 정도 전에 요청이 오면 그때 꼼꼼히 본다. 워낙 중요한 일이기에 소홀할 수 없다.
- 로봇랜드 항소심 준비에 변호인을 리드할 지역의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소송을 소송으로서 대응하고 공무원 중심 IF로 하지마라는 주문을 했는데 개선은 어떻게?
- 【스마트혁신산업국장】2단계 항소심 법률팀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 TF팀은 한 창구로 일원화했다. 지역의 명망가들이나 지역의 내용을 잘 아는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을 선임해 같이 공동 대응 하겠다.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에서 직접 총괄을 하고 있고, 우리 법무팀, 공무원, 변호사들도 참여하여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

- 로봇랜드 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해 창원시가 전체 사업을 설계부터 주주협약, 실시협약, 토지 소유권 이전 등 행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해서 패소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의향은?
- [시장] 시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로봇랜드 사업은 소송 수행까지 경상남도와 창원시, 로봇재단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대응하고 있는 사항이다. 창원시만의 별도 입장표명은 적절치 않다.
- 제소 원인에 대한 자문 결과를 들었을텐데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 (시장) 1심 소송 패소 직후 경상남도 및 우리시 법무관 등을 포함하여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복수의 권위 있는 법무법인에 판결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구조와 목적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시키지 못했고, 펜션 부지를 기한 내 제공받지 못해 대출금 상환이 불가하여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는 민간사업자의 주장이 받아 들여졌다고 본다.
- 2심 승소의 비결은 1심 패소의 원인과 성실 준비여부를 의회에 검증받는 것이다. 2심은 법률대리인을 리드할 지역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다시는 2~3분 변론으로 판사조차 공공사업을 이해 못 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시장) 변호사를 추천해 주면 자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겠고 2심 법무법인이나 도 중심의 대책 TF에도 적극 전달하겠다. 2심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도의 법무관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낼 수 있는 협상력과 재판의 대응력을 가진 승소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선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 창원시는 민관, 민자협약을 다시 재검토하여 왜 실패했는지 패소했는지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
- (시장) 항소심에서는 1심 변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철저히 보완하여 재판부의 로봇랜드 조성 사업의 구조와 목적, 민간사업자의 의도적 면탈 정황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문

우리 창원시의회는 국토교통부의 2009년 당초 계획을 뒤집고 경남·부산·울산 광역 대중교통망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 결정 강행을 반대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전동열차 투입 시 비용대비편익(B/C) 값이 0.5 수준으로 나타나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려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토교통부에 2009년 첫 사업계획대로 전동열차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전동열차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전적으로 적기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국회가 비수도권 지역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가 2022회계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통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관련 예산 편성 및 비수도권 지역 광역 대중교통망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한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단순히 경제성만의 사업이 아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경남·부산·울산이 하나되는 '부울경(동남권) 메가시티'의 초석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원 계획대로 되어야 경남도민, 부산시민, 울산시민이 전동열차로 마산(경남)~ 부전(부산)~태화강(울산) 세 지자체를 횡단하는 광역 대중교통망이 완성된다.

동남권 세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수도권에 대항하고자모든 모색을 다하고 있다.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전동열차 투입이 무산되지않게끔 국토교통부 등 대정부 상대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도 수도권과 같이 광역전철이 비수도권에서도 형성하기 위해 마산~부전~태화강으로 연결되는 광역 전철망을 구성하려는 노력으로 전동열차 투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국토교통부는 B/C에만 입각한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 여부 결정을 즉각 백지화하고 2009년 당초 계획대로 전동열차 도입을 실시하라.
- 하나. 기획재정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 편성하라.
- 하나. 국회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수조정 통해 2022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비수도권 지역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 하나.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동남권 메가시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투입을 사수하기 위해 합심하여 모든 대책을 수립·실행하라.
- 하나. 수도권 지역에서 전동열차를 통해 광역전철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는 비수도권 지역에도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산~부전~태화강을 잇는 전동열차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구하라.

2021년 10월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마산항 가포 모래부두사업 전면 백지화 촉구」건의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마산합포구 가포동 67-1번지 전면에 "마산항 가포물양장 개량공사"라는 이름으로 모래부두를 추가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었다.

마산항에 6,700㎡를 매립하여 추가 모래 부두 조성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하여 우리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으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작은 돌맹이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모래부두라는 돌맹이 하나가 드넓은 마산항의 물을 흐리고 있다.

올 11월에 개장할 마산항 서항지구와 구항 방재언덕 친수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가고, 친구와 여가활동을 즐기며, 마산만에서 휴식을 만끽할 날만을 기다려 왔었다.

임시 개장한 9월 추석 연휴 때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에는 엄청난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대부분 이용 시민들은 다른 도시로 가지 않고도 우리 동네 앞에서 바다를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을 갖고 앞으로 개장될 것에 대해 기대에 차 있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시민이 앞장서고, 관공서와 단체 등이 뒤에서 밀며 해맑은 마산항을 만들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이제야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다시, 가포모래부두 조성이란 말로 시민들의 모든 꿈들이 허사로 돌아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여름에는 마산만에서 수영축제도 하고, 돝섬 주위에서 잘피가 되살아났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다. 이런 마산항에 모래부두가 들어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마산항 가포모래부두가 왜 필요한지 묻고 싶다.

이미 마산항에는 연 136만톤의 하역능력을 가진 모래부두가 운영중에 있고, 모래 물동량은 2018년 59만톤, 2019년 24만톤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20년에는 14만톤으로 급감하였다.

그리고'해양수산부 기관 정기 감사보고서'에는 마산항 모래부두의 적정하역량이 과소평가되어, 필요 이상으로 부두가 개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듯이 모래부두를 추가로 개발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마산항 모래부두 입지 및 재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지지부진하게 그동안 끌어오던 마산항 모래부두 조성사업을 이젠 전면 백지화할 때다. 더 이상 우리는 모래먼지와 오염된 바닷물로 마산항을 걱정하고 싶지 않다.

초·중·고·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어시장에서 맛있고 신선한 수산물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상인과 손님들, 반려견과 산책하는 이웃들, 식사와 커피의 여유를 즐기는 가족들이 마산항 주위를 매일 돌고 돌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 우리는 마산항을 벗어날 수도 없으며, 떠나고 싶지도 않다.

지금은 우리의 자산이고, 미래에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산인 마산항을 우리는 반드시 여기 이 자리에서 지킬 것이다. 마산항에는 더 이상의 모래부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아름다운 마산항을 시민들의 친숙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즉각 가포물량장 모래부두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0월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촉구 건의문

우리 창원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 규모에 걸맞은 보건·환경 행정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를 요구한다.

창원시는 인구가 103만명이고 면적은 747㎢로 서울보다 넓으며, 지역총생산(GRDP)은 대전과 광주보다 높아 광역시 규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이미 갖추고 있다.

광역시 수준의 대도시 시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 부재로 건강과 환경정책에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구가 창원의 1/3밖에 되지 않음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된 세종시와 비교하여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의 발생·전파가 확산 추세이고 인수 공동 감염 및 외국 유입 감염이 증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조기 발견과 연구 등의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

2020년 창원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10,884건인데 비해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한 건수는 59,249건으로 5배를 넘는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8개 시군의 검사수요 집중 시 감염병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면, 공장폐수·하수·해수·대기·토양 등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각종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해진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관련 피해 우려 지역인 창원시 연안 해역에 대한 독자적이고 신속한 오염원 검사가 가능하며 기타 해양오염과 관련한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물론, 미세먼지 · 수질오염 ·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오염과 관련한 검사수요 대응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위기관리 대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창원시 3개 정수장 정수처리공정 개선을 위한 연구 업무는 물론이고 원수·정수 및 상수도 민원 관련 수질검사, 약수터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지하수 등 시민 이용 시설 수질검사 등을 위한 전문적인 분석 · 연구가 가능하다. 상수원인 낙동강수계의 조류와 항생제·방사성물질 등 신종 미량유해물질 감시를 통해 수돗물의 안정성 추가 확보도 가능하다.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을 포함하여 산업단지가 많으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1,729개소 중 최근 3년간 대기·수질오염도 등의 검사 건수가 153건으로 전체 사업장의 1.3%에 불과하여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 관리에 취약하다.

창원국가산단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시료 채취 후 검사를 위한 원거리 이동으로 인해 분석자료 신뢰도 저하 및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악취 분야, 유류화학물질 유출, 수질오염사고 및 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에도 신속한 조사와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을 통한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0월



내실있는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출범 촉구 건의문

지난해 12월 9일'특례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자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특례시와 특례시의회는 행정·의정 수요, 예산·인구 규모에 걸맞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고자 수개월에 걸쳐 중앙정부관계자 및 국회의원과의 면담. 1인 시위. 건의문 전달 등 다방면으로 요구하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때늦은 준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후속 관계 법령들은 전국 특례시 시장·의장 협의회가 요구해 온 특례사항들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에 특례사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기존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을 열거만 했을 뿐 새로 추가되는 특례사무는 전무하다.

이제 지방자치법 시행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창원유세에서 "10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게 하겠다."는 공약은 불행히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요구해 온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져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이 위안이긴 하나, 특례시라는 거창한 명칭과는 달리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중앙정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 사무특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자치분권위원회는 신속한 심의를 통해서 440만 특례시민이 받고 있던 역차별을 해소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합 창원시 10년을 되돌아보면,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103만 대규모 도시로 거듭났지만 지역 간 갈등 해소, 균형 발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지금까지도 산적해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출범하게 될 경우 기대에 찬 시민들을 다시 한 번 절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촉구한다.

- 하나, 중앙정부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규모에 맞는 행정 · 의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관계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
- 하나,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특례시 위상에 맞는 특례 부여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졸속 추진을 강행하기보다는 내실있는 특례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조속히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출범하게 될 경우 중앙정부에 반드시 책임이 따를 것이다.

2021년 10월





K2전차 4차양산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문

우리 창원시의회는 합동참모본부에 K2전차 4차양산 소요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한다.

합참은 2019년 소요군이 제기한 K2전차 4차양산 소요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추가 양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K2전차 양산사업은 2023년 종료될 예정이다. 창원은 국가지정 방산업체 18.8%가 모여있는 전국최대 방산도시이다. 추가양산이 없다면 지역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합참에 K2전차 4차양산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후속절차(소요심의, 사업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K2전차 4차양산은 해외 수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르웨이·오만·폴란드 등 K2전차 도입을 고려하는 국가에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전력화하는 유일한 전차'라는 강점을 알리고 신뢰를 줄 수 있다. K2전차 4차양산으로 중소협력업체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수출로 귀결되면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는 확대될 것이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국회가 기준 수명이 13년 이상 경과한 M계열 전차를 고집하는 대신 K2전차 추가 전력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K2전차 4차양산을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K2전차 4차양산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하나, 합참은 소요군이 제기한'K2전차 4차양산'소요를 연내에 조속히 확정하라.
- 하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소요검증 및 사업타당성조사를 긴급히 완료하여 필요한 예산을 2023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라.
- 하나, 국회는 사업타당성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라.

2021년 11월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적용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은 둘로 나뉘고 있다. 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다. 사람, 기업, 자금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국토의 면적 12%를 차지한다. 이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 2019년에는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하여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1000조 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1.9%를 차지한다.

통합원년 2010년 창원시의 인구는 당시 109만 명이었으나, 올해 인구는 103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지난 상반기까지 최근 3년 동안 3만 3천 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옮겨갔으며, 수도권으로 옮겨간 인구 중 20~30대 청년층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출의 50% 이상이 '직업'의 이유이다. 판교-기흥으로 이어지는'취업 남방한계선'은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86곳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다. 수도권에 사업체 본사의 56.9%, 1,000대 기업의 74.3%, 상장기업의 72.0%가 집중되어 있다. '일자리 부족 \rightarrow 청년층 유출 \rightarrow 저출산 \cdot 고령화 \rightarrow 상품 \cdot 서비스 수요 감소 \rightarrow 상점·공장 폐쇄 \rightarrow 일자리 부족'의 약순환은 계속하여 되풀이되고 있다. 2011년 기초지자체 중 1위였던 창원시의 실질 GRDP는 수도권 도시들에 밀려 4위까지 추락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 이전 조례특례제도를 비롯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의 제도적 노력과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노력에도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7년 93개에서 올해 106개로 증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였고,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스위스·이스라엘 등 해외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제는 정부에서 비수도권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 일자리, 기업' 등의수도권 쏠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비수도권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기업법인세 차등 적용'을 신속하게 제도화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건의한다.

2021년 11월





소부장 산업을 비롯 제조업 현장의 이익만 챙기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촉구 건의문

정부는 지난 2월 23일(화)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식'을 가졌습니다. 2020년 4월 1일 시행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2020년 7월 발표된'소부장 2.0 전략'에 근거를 두고, 핵심 소부장 분야 앵커 대기업을 중심으로 40~100여개 협력기업과 산학연이 집적하여'밸류체인 완결형 단지'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 동력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 소재, 정밀기계 등 5개 소부장 분야를 지정했고, 경남도와 창원은 정밀기계 분야로 선정되어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기계 산업 재도약기가 온 듯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아심찬 전략은 창원시 제조업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계 산업 중심 창원기업들을 사모펀드가 높은 차입금으로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과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100인 이하 제한 투자자들이 비공개로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일정 기간 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한 투자금 회수를 하고자 기업자산은 매각하고 설비 및 경상적 연구개발과 신규고용 등에 재투자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론스타가 인수한 외환은행,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딜라이브 인수, 배당만 1조1110억을 챙겼다는 코웨이 인수 등도 있지만 창원 내 사모펀드가 인수한 큰 회사만 해도 6개로 두산모트롤, 피케이 밸브, HSD엔진, STX엔진, STX조선을 포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 공작기계 국내 1위 기업인 두산공작기계도 해당되므로 어느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제조업 현장의 문제입니다.

국가 핵심기술 보호조치' 사업장인 두산공작기계는 2016년 4월 두산그룹에서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인 DMT홀딩스에 1조 1,308억원에 매각되었는데 매각 대금 중 4,700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입금 였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분할되어 신설법인으로 만들어진 두산공작기계는 설립 자본금도 단돈 5천원에 불과 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자본재조정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했고, 인수 후 5년 동안 당기 순이익보다 많은 5,367억원을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디티알오토모티브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자는 공작기계 사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자동차 부품사업장이고, 매각대금 2조 4천억원을 대부분을 역시 차입으로 한다하므로 고용과 기업방향 등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공작기계의 특성상 끊임없이 R&D 투자를 해야 하고, 자본력이 튼튼해야 하는데 사모펀드는 5년 동안 자기 투자금액의 몇 배를 챙겨갔음에도 기업 재매각으로 다시 공작기계 사업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자본이 들어와서 과다한 차입경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역의 고용 역시 지난 5년 동안 정년퇴직은 수백 명이나 현장직 퇴사 후 촉탁재고용 등을 제외한 신규채용은 미미하다 하므로 조사 후 이익배당에 맞는 지역 내 고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모펀드가 소부장 산업만이 아니라 제조업에서 이익금 챙기기에만 몰두하면서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011년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및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으로 설립요건이 완화되는 등 문턱이 낮아지면서 사모펀드가 제조업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소부장 사업을 비롯 제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이익 사냥에 대해 조사하고, 적어도 제조업에서는 사모펀드가 직접 개입하여 경영하는 행태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업장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사냥감으로 삼은 사모펀드에 대해 이익금을 환원해 R&D와 시설투자, 신규채용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소부장을 비롯한 제조업의 미래를 사모펀드에게 맡기는 현재 제도를 과감하게 개정해서, 제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해야 함을 건의합니다.

- 첫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기업사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모펀드가 기업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를 제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둘째, 창원시 관내 두산공작기계 및 6개 사업장과 같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업장에 대해 사모펀드의 이익금이 생산설비 및 R&D, 신규채용 투자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과 의무·강제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셋째, 인수·합병 관련이 단체협약상 준비단계부터 노조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밀실매각이되어온 바 인수합병 관련 사업장 내 사측-노조 간 정보 불균형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부·장을 비롯한 제조업의 미래와 지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모펀드 관련 현재 제도를 과감하게 개정하여,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1년 11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건의문

「주차장법」제7조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라 지난 7월 13일부로 우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11개소를 전면 폐지하였다.

이어 지난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 206개소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다.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될 정도로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법 강화는 누구나 공감하며, 또 어린이보호 구역에서는 어떠한 불법 주정차 행위도 결코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법 강화 이전에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주정차를 금지시킴으로써 당장 주차할 곳을 잃게 된 주민들은 대체 주차공간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피할 길이 없고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집단민원 제기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교방초등학교 등 학교 앞 주민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 매우 안타깝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가 24시간 이루어져 실제적으로 어린이 등하교가 거의 없는 야간시간에도 주정치를 할 수 없음에 주정차 허용 시간을 지정하여 현실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 심의, 시민 및 학교, 학부모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학교별로 실시 여부가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주고 있어 주차난 해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이에 학생들의 통행이 없고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야간시간에는 주정차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어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 공통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제의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시간도 현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로 되어 있지만 어린이 집중 등하교 시간의 현실을 반영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시가 추진 중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또한 현실성 있게 오후 8시부터가 아닌 오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로 예산확보, 부지선정 등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을 법제화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하나. 정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의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가능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존 오후 8시까지)로 전국지자체 공통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하나.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의 법 제정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1년 12월



-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국립' 전환 건의문

지난 3일 국회에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창원)」 용역비 5억 원이 2022년도 정부 예산으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 타당성 연구」 명목으로 통과된 예산이었으나, 국회 예산조정소위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수 천억 원의 국가 예산과 운영비에 대한 부담, 그리고 미술관 부지는 꼭 국유지여야 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국립미술관 건립을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동등한 문화 향유권을 누려야 함에도 국립현대미술관 4곳이 모두 서울과 충청권에만 위치하고 남동부권에는 한 곳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었습니다.

또한, 마산해양신도시의 미술관 부지가 현재 국유지가 아니더라도 이건희 미술관 송현동 부지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토지교환 형식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창원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추진위원회, 범시민운동본부, 103만 시민 서명운동 등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를 위해 2018년부터 체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예술단체인 한국예총·한국민예총도 창원관 건립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앞선'이건희 기증관 서울 결정'에 이어'국립현대미술관 분관 무산'이라는 참담한 결과는 지역사회의 열성을 두 차례나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격차를 도외시한 정부의 문화 일극주의적 태도에 지역 문화예술계는 실망과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은 반드시 창원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마산해양신도시 내 3만3000㎡ 규모의 즉시 착공 가능한 부지, 수려한 해양조망과 자연친화적 입지, 남동부권 1,500만명의 배후수요, 수소산업을 기반한 탄소제로 미술관, 기존 전시 위주의 미술관을 넘어서는 21세기 미래형 콘텐츠 등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토균형발전 특히. 문화분권은 역대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구해온 시대적 과업입니다.

정부는 남동부권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열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역소멸이라는 백척간두의 상황 속에서 문화불모지 남동부권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려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여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지역특화형 문화시설'이 반드시 '국립시설'로 추진되어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이 꼭 건립될 수 있기를 정부에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1년 12월





「창원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문

창원 진해지역은 조선산업의 중심지로서 2014년 11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가 감소되면서 심각한 수주절벽과 최근 조선산업이 조금씩 회복되는 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과 재확산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창원시 진해지역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2018년 4월 5일 창원시 진해구를 최초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를 연장하여 진해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2,191건 244억원이 지원되었고, 이는 고용촉진, 중소기업의 청년추가고용, 노동자생계부담 완화 등으로 이어져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또한, 창원시도 희망 근로 지원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25,182건, 596억원 지원으로 진해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조선산업의 선박 수주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나 지역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향후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선기자재 업체 등의 파산과 법정관리로 경기침체와 실업이 가속화되어 최근 몇 년간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조선소 인근 지역 많은 상가가 휴·폐업 등으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된 조선산업 불황과 고용감축은 소비감소와 인구 유출로 이어져 조선산업의 핵심 인력인 숙련된 기능공들이 조선업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중단 등은 되살아나고 있는 조선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닐지 염려된다.

일자리는 가정경제의 바로미터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며,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중단 없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8년 4월 이후 계속된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창원시 진해구 경제는 실낱같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간 재연장하여, 창원시 진해구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 의원들은 창원시민을 대표하여 2021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하라.

하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라.

2021년 12월



「쌀 재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곡 실시 촉구」 대정부 건의문

우리의 쌀 재배 농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와 농촌을 묵묵히 지키며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확기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노고와 땀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작년보다 쌀이 과잉 생산되면서 우리 농가는 풍년의 기쁨보다는 시시각각 떨어지는 쌀값을 보면서 주식 하락장의 투자자처럼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톤으로 전년도(350만톤)대비 10.7%가 초과 생산되었으며 지난 10월 5일 20kg 정곡 기준 5만 6,803원이였던 쌀값이 12월 5일에 5만 2,586월으로 두 달 사이 7.4% 하락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12.5.) 산지 쌀값 5만 4.327원에 비해 1,741원이 낮은 가격이다.

또한 전년도 생산된 구곡도 많이 남아있어 앞으로의 쌀값이 계속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개정 양곡관리법의 시행('20.7.30.)을 앞두고 쌀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 안정대책 수립을 제도화하고 그에 대한 매입 및 판매 기준을 마련,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곡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인 경우와 수확기(10월~12월)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이상 하락하는 경우 쌀 가격안정을 위해 매입 격리조치 할 수 있게 명문화하였다.

상기 대책은 쌀값 하락에 대비한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되던 변동직불제가 폐지되고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바뀌게 된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하지만 올해 10.7%나 쌀이 과잉생산되고 7% 이상 가격이 하락한 지금, 정부의 대책대로 시장격리 조치 등의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농민의 주름과 근심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쌀은 우리의 생명이며, 주식이며,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 자산이다. 그런 쌀이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낙인되어 정부가 마련한 쌀값 안정 대책이 있음에도 실행되지 못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식량 적정 재고는 두 달치 소비량이다.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쌀을 약 67만톤 보유하여야 하며, 올해 35만톤의 공공비축미 매입분과 재고 14만톤을 감안 약 18만톤 정도 식량을 더 보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와 어려운 국제 정세 속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정부의 쌀 시장격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아닐 수 없다.

이에, 103만 창원시민의 목소리와 민심을 대변하는 창원시의회와 모든 의원들은 쌀 재배 농가 소득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양곡관리법에 규정한 대로 2021년 쌀 공급 과잉 물량을 시장격리 조치하라.

하나.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논 타작물 사업을 확대 실시하라

하나.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격리가 자동 조치되도록 관련법을 강화하라

2021년 12월





의회운영위원회



제10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11, 25.~ 12, 20.(20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기간 중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위원장 조영명)는 2021년도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도시발전연구회, 창원시역사 · 문화연구회,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 기후위기 · 그린뉴딜 연구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예비심사와 △2022년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안)협의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등 총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108회

10월 22일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6개소를 방문해 추진현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현장을 살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또한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안 △2021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코로나19와 씨우고 있는 모든 문들을 등 함께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니다. 합니다 하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 위원회는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5건, 「창원시출연 기관 출연 동의(안)」등 동의안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제108회

10월 22일 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 위원회는 성주버스차고지 수소충전소와 상남 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 하고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복지 여성위원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예비심사 △'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109회

12월 2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 위원회는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과 의창노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증축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 위원회는 「창원시 재활용품 상설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 3건, 「구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제108회

10월 25일 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 위원회는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과 해운대 수목원을 방문하여 하수시설과 쓰레기매립장 복토 후 조성된 수목원을 견학했다. 이날 현장 에서는 창원시 하수처리시설 개선 방안과 쓰레기매립장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다. 또한, 「창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신추산아파트상가 민간위탁 동의안」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0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 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창원지역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건의'진정서에 대해 심의하고, 3개 부서의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 장례회) 기간 중 건설해양 농림위원회는 「창원시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창원시 농업인수당 지원 조례제정」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 장례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양일간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7일 제3회 창원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포커스





회원1,2 · 석전 · 회성 · 합성1동

- ①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죽어서도 외로운 그들을 기억 합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 했다.
- ② 장애인단체 한우리인성회 창립30주년을 맞아 창동예술촌 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감사패를 받았다.
- ③ 제109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발의한 「창원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통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했다.
- ④ 생활정치 아카데미 창원시민회의가 주최한 '2021 생활정치 의정대상'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는 모습









문 순 규 의원

── 양덕1,2 · 합성2 · 구암1,2 · 봉암동



- ①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했다.
- ② 제109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했다.
- ③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단감수확을 위한 봉사활동 참여 모습
- ④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마산해양신도시! 구도심과의 동반성장, 상생발전을 기대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하고 있는 모습









손 태 화 의원

- 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 ①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했다.
- ② 어르신의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양덕2동 탑골 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했다.
- ③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④ 제109회 정례회 기간 중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유공의원 공로패를 수상하는 모습









이 우 완 의원

- 내서읍



- ①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발의한 「창원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 ② 제107회 임시회 기간 중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오수맨홀 월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합니다' 주제로 5분발언했다.
- ③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질의하는 모습
- ④ 월2회 거리에서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청취하는 '우리동네 불편수거' 사업 활동 모습











임해진 의원

○ 회원1, 2 · 석전 · 회성 · 합성1동





- ① 도시발전연구회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 블랜딩 전략연구' 토론회에 참석했다.
- ② 제109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했다.
- ③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보상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민과 토론하는 모습
- ④ 마산문인협회의 지역시인 시화 작품을 전시한 임항선 그린웨이 시화전에 참석한 모습







조 영 명 의원

── 양덕1,2 · 합성2 · 구암1,2 · 봉암동



- ① 제107회 임시회에서 '개통 3년된 팔룡터널! 교통량저조 해소방안으로 출퇴근시간 통행료를 50%할인하자' 주제로 5분발언했다.
- ② 마산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 업현황을 보고받았다.
- ③ 어르신을 위해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음식을 배식하는 모습
- ④ 마산역주변 번개시장 일대에서 코로나19 방역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진 상 락 의원

→ 내서읍



- ①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심 속 생태하천 광려천 전담 부서 설치 촉구' 주제로 5분발언했다.
- ②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보건소를 찾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③ 내서읍 광려천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 활동모습
- ④ 제109회 정례회 기간 중 의정발전 유공의원 공로패를 수여 했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발한 연구활동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수)는

10월 7일 '창원시 문화환경 정주여건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한국경영연구소 여성환 대표를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환경 변화, 앞으로의 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원시 역사 문화 연구회(대표의원 공창섭)는

11월 18일 '창원의 성곽유적 현황과 보존활용 방안'을 주제로 온 – 오프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시의 다종다양한 성곽유적 현황과 조사 성과를 살펴보고, 보존관리의 문제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관광·축제마케팅연구회(대표의원 권성현)는

11월 5일 거제시의 거제식물원, 숲소리공원, 외도 보타니아 등 비교견학을 통해 우리시에 접목가능한 장소의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이를 연계한 축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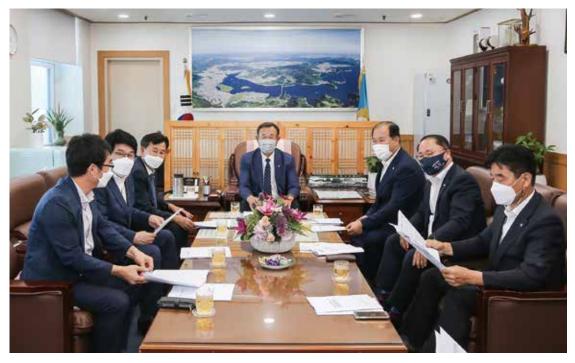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전홍표)는

11월 22일 연구용역에서 조사한 창포만, 거락숲, 광암해수욕장 등 지역의 환경자원을 둘러보며 지속가능한 활용방안과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2021. 10. 5. 의장단 간담회 개최



2021. 10. 8. 지역 소규모 도서관 도서 기증식





2021. 10. 12. 창원소방본부 격려방문



2021. 10. 13. 초록우산 아동의회 본회의 개최



2021. 10. 19. 제9차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2021. 10. 21. 제108회 임시회 개회



2021. 10. 22. 진해노인복지회관 어르신센터 개소식





2021. 10. 26. 마산국화축제 현장방문



2021. 11. 1.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2021. 11. 2. 긴급 의장단 간담회 개최



2021. 11. 13. 창원시 청소년 문화의회 개최



2021. 11. 23. 특례시 시민협의회 대표단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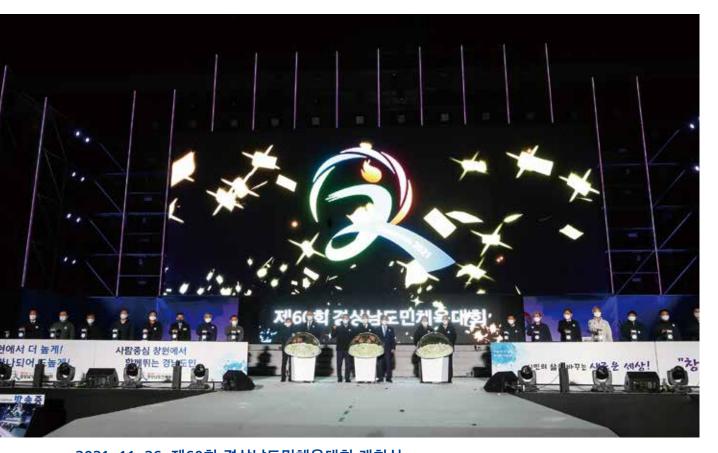


2021. 11. 25. 본회의장에서 진해 벚소리합창단 공연





2021. 11. 25. 제10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1. 11. 26. 제60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회식





2021. 11. 27. 도시농업 문화축제



2021. 12. 2. 창원시의회 ↔ 창원시 인사업무 협약식





2021. 12. 13. 퇴직공무원 감사패 수여



2021. 12. 23. 월영광장 조성공사 준공식





2021. 12. 24.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 기공식



2021. 12. 27.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2021. 10. 19. 언론사 기고

오징어 게임과 대장동



구 점 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 세계가 한국의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다. 소재는 우리가 어릴 적 놀이기구가 많지 않았을 때 친구들과 함께 해왔던 놀이들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오리떼기(달고나)'. 운동회 때면 피날레를 장식했던 줄다리기 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우리의 놀이 속엔 재미와 협동, 배려가 믹스되어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가 담긴 놀이문화로 정착된 것 같다. 오징어 게임을 본 세계인들이 한국 놀이를 따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올리는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한국의 원화가 구글에서 세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검색된 통화가 됐다'는 기사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드라마를 제대로 본 게 아니다'라는 조언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높다.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총 6개의 게임을 통과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참가자들은 현실에서 많은 빚을 지거나 어려움에 직면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이다.

나는 드라마 초입부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잔혹함에 계속 보기를 포기했다가 며칠 후에야 마저 볼 수 있었다.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이러한 게임이 있다면 목숨 걸고 참가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내 것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몇 천 배의 수익을 올리는 현대판 오징어 게임이 있다. 서민들은 내 목숨뿐 아니라 가족의 목숨까지 걸고 게임에 참가하는데, 대장동 게임은 특별한 위험 없이 몇 천배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어떤 국민이 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누가 더 많이 가질지를 의논하다 다투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기사도 봤다. 국민은배신감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정말 기회가 평등하였는지, 과정은 공정하였는지, 결과는 정의로운지 묻고 싶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사정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으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심각한 지경이다. 코로나 사태가 자본주의의 치명적 병폐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여기에 대장동 게임은 청년과 국민들의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나 직원들의 우월적 지위에서 부동산 투기로 세상이 시끄러웠다. 이제는 나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는 것을 보면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생각이다. 힘없는 국민과 서민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하는가? 대장동 게임을 전 세계인과 국민이 열광하는 오징어게임으로 바꾸어 놓아야 할 책임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2021. 10. 19. 언론사 기고



김 상 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진해신항 사업의 화룡점정, 누가 찍을 것인가

2년 가까이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는 방역관리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코로나는 독감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대상이 됐다. 인원 제한 없이 누구든 만나고,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떠나고, 어떤 운동이든 마음껏 누리던 일상이 '정상'이었다면. 지난 2년간 '비정상'을 겪은 지금, 어디까지의 일상이 '정상'이고, 어디까지가 '비정상'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11월이면 시작될 단계적 일상 회복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곳이 또 있다. 바로 진해신항이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진해신항을 부산신항과 함께 세계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관문이자 최첨단 물류 전진기지로서 가덕도 신공항, 연계 교통망과 함께 트라이포트로 육성, 세계 제1의 환적 거점인 메가포트로 개발하고 있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과 송도 국제도시의 성공사례를 보면, 진해신항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게 보인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거점이 될 배후항만단지와 내륙 물류산단의 조성, 시급한 교통망 확충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자유 구역인 송도 국제도시는 약 40조원이 투입된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신항의 배후지구로 구상, 개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인천대교로 이어지는 제2경인 고속도로와 함께 지하철, 해운, 여객 등 기반 구축과 함께 현재는 물류, 관광, 레저 등 많은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인 미래도시라 평가를 받으며 부상하고 있다.

배후단지가 중요한 이유는 물류의 환적이라는 1차적 기능 외에 공항이나 항만을 기반으로 한 친수시설 관리와 지원, 교역을 위한 제조, 금융,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사회ㆍ경제적인 효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배후 주거지와 함께 행정, 교육, 문화 등 기반시설이 수반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송도의 사례에서처럼, 진해신항이 가덕도 신공항과 함께 세계 최대의 물류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관련기업 유치와 생산 및 가공, 환적 등을 위한 배후단지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해신항 조성계획과 함께 배후단지의 조성계획이 여태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용을 다 그리고 난다음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빼먹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항만배후단지의 조성과 함께 배후단지의 물류를 잇는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의 확충 역시 마찬가지이다. 진해신항을 거점으로 배후단지에 집적되는 물류는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을 통해 대륙 물류와 연결되고 이를 기반으로 물류비와 운송 기간이 획기적으로 혁신됨으로써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서비스가 구축된다. 이것은 진해신항의 세계최고 환적 거점항이라는 차별화된 위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 최고의 물류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진해신항이 위치한 창원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문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 사람과 물류를 어디든지 신속하게 연결하는 철도망(이를테면, 창원과 대구를 직접 잇는 창원산업선과 진해신항선, 수서발 SRT) 뿐만 아니라, 혼잡한 도심을 거치지 않는 창원권 외곽순환도로 (창원 북면~함안 칠원, 진해 행암~구산 심리 등) 구축은 부산을 경유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동시에 창원국가산단과 마산수출자유지역 등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방안임은 자명하다. 대선 열기와 이슈로 전국이 후끈한 요즘, 정치권과 정당의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지금의 진해신항 건설계획은 '정상'인가? '비정상' 인가. '정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글로벌 물류시장의 한계 없는 초성장 속에서 진해신항과 연계한 배후 단지나 교통망 구축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미온적 방침에 동조한다는 것인지, '비정상'이라면, 왜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약속이나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세계의 대륙과 바다로 승천할 용의 눈동자를 이렇게 없는 채로 내버려 둘 것인가. '일상의 정상화'가 화두인 요즘,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진해신항 건설계획의 정상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2021. 10. 27. 언론사 기고

사무장병원 척결 위해 특사경 도입을



공 창 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의료법에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횡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 등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건강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급여비 허위 · 부당청구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으로꼽히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재정누수 규모는 3조 5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5.32%인 1872억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장병원은 수사가 시작되거나 환수 절차가 진행되면 그 사이에 발 빠르고 교묘하게 재산을 처분 · 은닉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권이 없어자금을 추적하지 못하고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현행 단속체계로는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징수액을 늘리는 데 한계가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수사기간을 8개월정도 앞당겨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강화로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 하자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정춘숙 의원(2020.8.18.), 서영석 의원 (2020.9.1.), 김종민 의원(2020.11.23.)에 의해 입법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계류 상태에 있다.

무엇보다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각한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이므로 척결 대상이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 하자는 것은 공단의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십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일각에서는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별도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정상적인 병원인 것처럼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특정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2021. 11. 10. 언론과 기고



박 춘 덕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한일 해저터널 건설, 대선후보는 답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새 대통령이 탄생한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윤곽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각 진영의 후보들은 저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내세우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자영업·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인들까지 코로나 19로 피를 토하고 있다. 다음 대통령은 파탄난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 40 · 50대 직장인들 역시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로 먹고사는 문제를 꼽았다.

필자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로 접근 하길 바라며 대선 후보님들에게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한다.

한일 해저터널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고 평화경제 구현의 바탕을 이룰 수 있다.

해저터널은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시대에 따른 역사적 의미를 확보함으로 환태평양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사업 이다.

해저터널은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참여로 동북아 평화·번영을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 이다.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확신할 수 있는 협력사업으로 대한민국 남동부의 중요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이동하는 것 이상으로 물류를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터널 건설로 전기, 가스, 통신망을 연결해 자연 재해로 물류 교통이 끊어지면 막대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므로 해저터널 설치로 고립되지 않고 바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해저터널은 한국과 일본만의 경제적 이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대한민국-북한을 잇는 환동해의 거대경제로서 해저터널의 이익은 일본, 한국만이 아닌 미국, 러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작금의 한일관계는 정치적으로 악화일로에 있으나 터널 건설로 인한 정치와 문화는 분리하되 경제적 측면은 고려되어야 한다.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먹고사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가덕도와 쓰시마를 연결한다면 가덕 신공항과 진해 제2신항, 부산 강서구의 유라시아 철도 출발점으로 창원과 부산은 동북아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다.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한일 해저터널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금은 대선후보가 답할 시간이다. 한일 해저터널 문제는 지방선거 공약을 넘어 영남권 대선공약으로 완성되길 희망한다. 2021. 12. 29. 언론사 기고

나는 왜 시의원을 하는가?



구 점 득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2021년 한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 예전에 나는 학생들과 함께 좋은 일엔 함께 웃고, 마음 아픈 일엔 함께 아픔을 나누기도 했다.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부모님께 칭찬을 받은 학생과는 함께 기뻐하고 반면 노력에 비해 성적이 좋지 않거나 친구와 다투게 되고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는 학생에게 용기를 보내는 일들은 모두가 나에게 소중한 일상들이었다.

2018년 뜻하지 않게 정치를 할 기회가 찾아왔다. 내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마는 성격을 잘 아는 가족들의 도움에 힘입어 그해 초여름은 도로 위에서 나를 알리는 일을 시작해 도로 위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열정으로 시작한 일이 결실을 맺어 창원시의회에 들어와 일한 지 벌써 3년 반이 지나고 있다.

이제는 나를 지역의 대표로 시의회에 보내준 주민들과 함께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고 또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를 대변하고자 분주히 뛰어다닌다.

힘들고 생소하던 이러한 일들이 이제 너무도 익숙하고 몸에 배어 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창원과 경남 청소년들의 요람이 될 수 있는 창원문화복합 타운 즉 창원SM타운의 정상 개관을 위해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2년여 전부터 의정 단상에서 주장하고 요구했으나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곳이 정상 개관되지 못하면 창원시민에게 큰 죄를 짓게 되는 일이라고 몇 차례 주장하기도 했다.

스타필드 또한 뜨거운 감자였다. 침체돼 가는 창원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인가? 주말이면 외지로 빠져나가는 쇼핑 인구는 당연한 것인가? 이러한 과제들과 함께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2개 층 정도를 줄이는 너무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스타필드를 허가했다. 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사화공원 사업은 어떠한가? 공원 일몰제에 따라 그동안 주민이 평온하게 이용해오던 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안정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공원 개발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는 듯해 시정질문 이라는 공개된 자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당초 사업 계획은 공원 조성 공사비가 118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내용은 980억 정도가 줄어든 200억원 정도가 공원 조성에 투자된다고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창원시에는 무수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된다. 시작은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이야기되지만 진행과정에서 그 모습들이 조금씩 변해간다.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시의원의 몫이기도 하다.

때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누군가 나에게 왜 시의원을 하냐고 묻는다면 이것이 답이 될 것이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는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호랑이보다 더 힘차고 열심히 뛰어야겠다.





임 해 진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창원특례시의 인구반등과 저출산 대응 정책

인구감소의 문제가 대한민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창원시도 예외는 아니다.

창원시는 2021년을 인구 반등의 해로 정하고 인구 정책담당. 인구백만사수TF팀을 운영하며 100만인구 사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2010년 통합당시 108만이던 인구는 2021년 10월 현재 103만 3천명 이다. 또한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수)은 전국 0.84. 경남도 0.95. 창원0.90으로. 1명이 채 안된다. 이에 창원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인구 반등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자녀양육가정 등 생애주기별로 73개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의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중고등 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 4자녀 이상 가정 주택지원 등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들이며, 출산 축하금은 2019년부터 둘째아 출산시부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 으로 출생아 모두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 한다고 하니 늦었지만 환영하고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경쟁이 중단될 것 같아 다행이다.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아동수당이나 자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이중 공제를 이유로 자녀 세액공제를 제외시키는 일관성 없는 정책 또한 점차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조원 가까이 쏟아부었지만 해법은 찾지 못한 채 매년 합계출산율은 떨어지고 출생아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 인구감소의 문제는 생애 특정 시기에 집중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결혼을 꿈꿀 수 있는 보금자리가 지원될 때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창원시가 2022년 청년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창원을 선택할 때 혼인율과 출산율이 증가하고 인구도 반등될 것이다. 또한 자녀 출산의 꿈을 꾸려면 평등한 부부관계, 부부의 공동육아,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가능하고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창원시는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800여개의 어린이집, 450여명의 아이돌보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돌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고 있으며 중복적인 부분 또한 많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 자라기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100만 인구를 사수하거나인구 유출을 막고자 하는 정책에 우선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와 지역사회가 하나의 돌봄 공동체가 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창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발전방안 모색



최 희 정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시는 2020년 여성친화도시2단계로 지정되어, 2021년부터 5년간 여성을 비롯 청년,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도시로의 전환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여성친화도시지정을 위한 치열한 경쟁의 과정을 수행 하게 된다. 1단계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으로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지만, 2단계 여성친화 도시의 지정은 의지가 아닌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여성친화도시구축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에, 창원시가 경쟁력있고 내실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한다.

첫째, 현재 모든 지자체의 가장 큰 관심 과제는 인구감소 문제로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시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연령층은 청년인구이며, 그 중 2019년 기준 창원시 청년 남성인구는 136,184명, 여성인구는 113,956명으로 119.5의 성비를 보인다. 이는 같은 연령의 전국 청년 성비인 109.8보다 크게 높은 수치로, 청년 여성들에게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여성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현재 구성된 시민참여단에 15세에서 34세 여성의 참여가 성실히 이루어져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경제사회 참여확대사업은 여성들이 가장 관심 있고 요구가 높은 사업이다. 요즘은 경력단절이 아니고 고용단절이라고 할 만큼 일자리가 없어 여성의 사회참여활동이 제한되기도 한다. 여성의 재능기부참여 및 활동이 포인트로 적용 지역화폐로 보상, 사회 참여유도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사업을 제안한다. 또한 창원시가 전국에서 수소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주도하는 만큼 환경수도 창원과 연계된 창원형 여성 일자리 창출로의 고민이함께 이루어지면 창원시만의 특성화 산업과 연계되리라 본다.

창원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 걸음 더 '배려'하고, '참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우선하고, 시민들과 소통과 교감을 통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뤄진다면 참 경쟁력있는 '창원시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리라 기대해 본다.



정 순 욱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2021. 11. 10. 창원 [[보 대273호 개대

말(言)의 무게

말(言)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말들의 홍수 속에 진영 간 논리는 있지만 국민 입장은 무시 되는 듯합니다.

[논어]에는 실언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되고',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나누면 말을 잃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잃지도 않고, 사람을 잃지도 않는다.' 하였습니다.

말(言)이란 포유동물에게만 있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을 목구멍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 소리 입니다. 말에는 사람의 생각이 표현되는 만큼 신중 해야 합니다.

자신의 표현이 잘못되어 실언을 하였다면 주워 담을 수 없고 그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오해를 해소하고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실언(失言)이란?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실수로 잘못 말한 것입니다.

실수는 '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한다면 습관이 되고, 그런 습관이 누적되면 인성이 됩니다. 소리로 표현되는 말은 혀의 예술입니다.

표현하려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혀의 위치는 변합니다.

유익한 말은 힘을 주지만 잘못된 말은 평생에 상처를 주어 도리어 부메랑으로 돌아오듯이, 세치 혀를 잘 놀려야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말씀 언(言)에 입구가 밑에 있는 이유는 평범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지도자가 되려는 분들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보면 자신의 생각이 담긴 이야기가 시민의 입장에서 동의가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다보면 변명으로 순간순간을 넘기려고 하는데 자신의 말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진실된 사과를 해야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것 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言)에는 이야기 하려는 이의 생각이 나타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021. 11. 25. 창원되보 제274호 개재

낚시와 취미



전 병 호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얼마전 창원시는 낚시채널 방송에 관광과 낚시라는 관광 홍보용 방송을 제작해서 방송했다.

낚시는 올해 처음으로 부동의 1위였던 등산을 제치고 '낚시 인구 700만! 국민 취미'의 반열에 올라섰다. '아재'들의 취미로 취급받던 낚시가 20~30대 여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마음까지 사로잡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방송과 낚시 장비와 기술의 발전이다.

낚시꾼들은 수렵 본능을 자극하는 승부욕, 경력이 쌓일수록 늘게 되는 기다림의 미학,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힐링 효과 등을 낚시의 매력으로 꼽는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유연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로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 일상화 되면서 퇴근 후 취미활동을 즐기는 직장인이 늘어났고 코로나19로 실내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안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낚시 등의 야외운동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낚시 인구 증가로 환경오염과 남획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낚시금지법 개정'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국회에서 전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낚시계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낚시에 사용하는 떡밥과 어분 등의 미끼가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앞 다투어 강과 호수를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낚시협회는 낚시 인구 천만 명 시대에 돌입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낚시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낚시를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환경정화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취미를 규칙적인 운동으로 하게 된다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이로워 더 활기차고 건강한 도시가될 것이다.

사전적 의미의 취미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일을 지칭하는 말로 '서두르다, 달려간다'의 취(趣)와 '맛, 취항'의 미(味)가 결합된 단어이다. 즉 생계나 남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심리적인 측면에서 취미생활은 업무나 대인관계에서 오는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행복을 느끼게해준다.

이제 낚시 인구들도 자발적 환경 정화활동을 함께해 좋은 낚시 환경에서 즐겁게 낚시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아름다운 강과 바다를 다음 세대에 물려 주어야 할 것이다.

2021. 12. 10. 창원 시보 제275호 게재



백 승 규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2050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스마트도시 창원의 변화

1970년대 전국 최초 계획도시 및 국가산업 · 방위 산업단지 조성지로 창원이 결정되면서 조용한 농촌 마을이 제법 도시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였다. 1974년 부터 창원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창원으로 속속 입주하게 되었고 명실상부 기계산업의 메카, 제조업의 중심지로 발전해왔다.

코로나19 대유행,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 급증 등으로 50년 가까이 창원경제를 이끌어온 창원산단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전통 기계제조업에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빠르게 대처한 창원은 2019년 창원산단이 스마트산단에 선정되어 ICT를 접목한 첨단 기계제조업 중심의스마트그린산단으로 변화를 꾀하였고 전국 최초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개통하는 등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창원시민, 집행기관, 시의회 모두의 노력과 관심으로 이루어낸 쾌거이며 창원경제를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기대한다. 이처럼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전통 산업만을 고수했다면 지금 창원경제와 환경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쇠락했을 지도 모른다.

2019년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사람과 환경의 공존이 강조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창원시도 다양한 사업 추진 으로 탄소 제로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가음동 녹지공간 외 5개소에 조성되는 미세먼지 차단 숲은 기후위기 속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좋은 예로 산업단지의 탁한 공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는 범시민 손수건 사용하기 운동과 함께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청 등 70개 공공청사 화장실에 종이타월을 없앰 으로써 공무원부터 탄소제로화에 앞장선다. 시민들도 스스로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며 도시텃밭 가꾸기, 자전거 타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선도도시 창원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최근 30년 사이 우리나라 평균온도는 1.4℃나 상승 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회원국 중 5위라고한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다. 지자체는 정책을 추진할 때 기후위기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고 시민들도 작은 곳에서부터 탄소를 줄이는 습관을 실천해야한다.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시의회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 2050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스마트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창원 대변혁이 기대된다.



2022. 창원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월별	회기별	회 기		주 요 처 리 안 건	비고
	계	10회		• 정례회 50일, 임시회 45일	
	제110회	1. 5.(수)	1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11회	1. 24.(월) ~ 1. 25.(화)	2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12회	2. 10.(목) ~ 2. 14.(월)	5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임 시	제113회	3. 11.(금) ~ 3. 21.(월)	11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결산검사위원 선임시정 질문조례안 및 기타 안건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일 3. 18.(금)
회	제114회	4. 14.(목) ~ 4. 19.(화)	6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15회	7. 1.(금) ~ 7 .4.(월)	4	의장단 선거 (7. 1.)상임위원회 구성 (7. 4.)	창원시민의 날 기념식 7. 1.(금)
	제116회	7. 18.(월) ~ 7. 27.(수)	10	•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 차 정 례 회	제117회	9. 15.(목) ~ 10. 7.(금)	23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시정 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임 시 회	제118회	10. 26.(수) ~ 10. 31.(월)	6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 차 정 례 회	제119회	11. 25.(금) ~ 12. 21.(수)	27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추경예산안 시정 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u>창원시의회는</u> 시민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창원시의회 인터넷방송



유튜브, SNS로 창원시의회를 만나보세요

방청안내

방청안내 일반신청(개인)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방청절차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 교부 ▶ 방청

문 의 창원시의회사무국(의사기록담당): 055)225-5311

홈페이지 https://council.changwon.go.kr

창원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의회소개, 의정활동, 의회기능, 회의록 검색, 의회에 바란다 등 의회의 다양한 정보검색은 물론, 창원시의회 대외적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시민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